

KNSI REPORT

컨퍼런스

<제 19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2009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일시 : 2009년 3월 9일(월) 16:30-18:3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사무실

- 2009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 ▶ 사회: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교수)
- ▶ 발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 토론: 서보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정철(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송실대 교수)
주장환(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교수)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나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성: 코리아연구원이 계획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관련 정세분석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발사 준비에 대해 미국과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지난해부터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안적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좌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 달 정도 (좀 더 길게 잡으면 5-6개월 정도)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고 남-북/북-미/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발표를 듣고, 서보혁, 이정철, 주장환 세 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육식 대표께서 최근의 이런 복잡한 상황이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 15 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육식: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짧게 토크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써온 페이지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제기되는 질문은 역시 ‘북한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북한의 대남전략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비난, 위협의 이면에는 6.15선언의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발표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후자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전면적인 대결만 남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언술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거 YS정부 때처럼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하기보다는 MB정권을 흔드는데 두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일차적인 관심사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전자에서 후자 쪽으로 넘어가는 징후들은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합동훈련-키 리졸브-와 관련된 문제이겠습니다만, 오바마행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양국에서는 키 리졸브가 방어용 또 연례훈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미양국의 군 수뇌부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또 거론하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군사적 투입을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거론된 직후에 열리는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인식의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주목을 하고,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강구하면서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문제 해결까지 포함한 통 큰 담판을 시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김정일체제의 3기 출범, 후계체제의 준비. 이런 대내적인 문제들이 외부적인 위협의 증대와 맞물려있는 시점에서 먼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적인 체제 단속과 김정일 3기체제의 안정화를 먼저 기하고 그 이후에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려는 ‘선 내치 후 외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이 배경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이런 전면적인 대결태세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정부 흔들기 의도를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법칙을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북한이 오바마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관계 정상화가 되더라도 미국의 핵위협 즉, 남한에 대한 핵우산 이라든지, 미국 핵무기의 남한의 재배치나 일시통과 이런 위협이 해소되지 않으면 북한은 관계정상화가 되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6자회담은 북한의 일방적 핵포기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또 하나 간접적인 이야기겠지만, 셸리그 해리슨이 지난 1월에 평양에 다녀와서 리근 미주국장이 “핵협상도 하고 있는데, 미사일 협상은 왜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최근 로켓발사 준비설하고 맞물려서 2000년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부시의 등장으로 무산된 미사일 협상의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양태도 과거보다는 남한의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오늘 발표한 군 통신망의 중단 이런 구체적인 위협조치도 따르지만 동시에 유엔장성급회담을 제안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중단을 촉구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희망적 사고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고 북한체제가 체제안정화(김정일 3기체제의 출범)를 마무리한 이후, 즉 4월 말부터 혹은 5월 초부터 미국과의 담판을 시도하는 이런 양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담판, 일종의 통 큰 타협의 골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얘기되었던 부분, 오바마행정부도 이야기 했던 부분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경제적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일관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그 알파가 바로 군사문제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핵우산의 철수를 포함한 미군 핵위협의 해소문제, 그 다음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의 문제, 주한미군 준비태세의 변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이 6자회담의 2단계 이행조치가 마무리가 되면 미국이나 6자회담의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핵물질 및 핵무기의 폐기를 들고 나올텐데, 북한은 이것을 군사문제로 연계시키면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상응조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양보조치도 동시에 취해야 된다. 일종의 군사 대 군사의 협상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미국 핵위협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중장기적 전략, 거대한 비전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맹전략, 미국의 핵전략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군사훈련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오바마가 국방정책에서 주목했었던 내년에 국방비는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겠지만, 대형무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비의 절감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아프간 상황을 볼 때 해외 주둔 미군, 특히 주한미군의 전력운용의 유연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텐데 이걸 한반도의 긴장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경우에 무기사업의 재조정을 통한 국방예산의 절감,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한 아프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신속한 투입 태세의 확보 등으로 볼 때는 북미간에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국, 일본 등 이 지역의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로 걷게 되면 핵우산의 철수문제라던지 군사훈련,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북미간에 합의하기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인공위성기술이 미사일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는 타당성을 갖습니다만 인공위성 자체를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미사일을) 안 쏘면 3월 위기가 일시적인 국면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북한 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논의를 지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6자회담의 틀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 이다. 작년 12월 6자 회담 때도 북한의 검증 미합의를 이유로 한미일 삼국은 에너지 중단카드를 꺼내들었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것은 합의사항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라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것과 흡사하게 북중러 3국은 적어도 인공위성은 자주적 권리, 주권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입장이고,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면서 6자회담 재개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명박정부의 대응수준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상당한 파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나 경고가 필요하다. 근데 한국은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당사자가 될 순 없지만, 외곽에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100%이다. 그리고 90%이상의 가능성은 에너지 지원 중단입니다. 지금도 에너지 지원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상태에서 에너지 지원은 더욱더 어렵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너지 지원 중단을 공식화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0%이상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PSI 및 MD참여문제가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남북관계는 정말 기존의 갈등구조 플러스 서해상의 구조적 긴장,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상당한 위기국면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미사일을)쏘면 MD로 요격하겠다고 나오는 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D로 요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본은 국내

용 성격이 강해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MD능력은 인공위성을 떨어뜨릴 능력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파리채를 가지고 독수리를 잡겠다’ 라는 것과 흡사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상 배치 MD로 요격할 기술력은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바마가 요격을 명령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요격을 시도해서 못 맞춘다면 망신만 당하고 끝나겠지만, 혹시라도 맞출 경우에는 이진 북한이 선전포고, 도전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미국과 일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오바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위성을 안 쏘면 더할 나위 없고, 쏘더라도 4월 말, 5월 초쯤 되면 보스워스가 평양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미국정부가 100일 이내에 (출범 후 100일까지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정치문화가 존재하는데요) 대외관계에서 초기세팅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외교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힐러리에 이어서 보스워스의 동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대북정책 재검토도 4월 말까지는 대체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4월 말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김정일 3기 체제가 상당부분 안정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대북특사를 수용하는데 있어 정치적으로 크게 부담가질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공위성이 발사되지 않고, 서해상의 교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점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인공위성은 발사되었는데, 서해상에서 교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4월 말 5월 초에 보스워스가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사이에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이것은 상당부분 유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올 상반기까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6자회담은 분명히 서로 엇박자를 연출하게 될 텐데요. 남북관계는 이미 잘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 6자회담이 엇박자를 연출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에너지 지원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조치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원상복구도 경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6자회담은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동력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역시 북미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1,2월 달이 북미간의 신경전, 탐색기였다라고 한다면 3월은 갈등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한 달은 냉각기 형태를, 4월말~5월 초부터 본격적인 북미접촉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스워스가 평양을 방문할 경우에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스워스가 갔을 경우엔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 중 하나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북한은

이것에 대하여 그 책임은 남한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북미 협상 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는 오바마행정부가 6자회담이 열리면, 차기 6자회담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을텐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는 검증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결렬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현실가능한, (타협가능한) 어떠한 차기 6자회담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강경론을 의식해서 검증의정서 채택을 보스워스가 북한에 제안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6자회담의 재개시점, 재개 시에는 재개 상태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끝으로는 북미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보스워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보스워스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지 않으면 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바마행정부 입장에서는 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 에너지지원 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북한의 다른 미래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지속가능한 대북안전보장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정권교체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대북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서상에서, 외교적인 약속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핵우산 철수의 문제,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문제, 주한미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성: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의 태도, 남한의 태도, 오바마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하나의 돌파구로서 보스워스가 방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아니면 훈련이 끝나더라도 남북한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 보시죠. 또한 미사일 발사 문제도 논의해 보시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생각도 짚어보고, 남한 지도부의 생각도 짚어보고, 남한과 미국의 강경 군부의 생각도 한번 짚어보고, 또한 중국의 지도부는 이러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미사일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정세 대응적이라기보다는 공세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준비해왔던 카드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말린다는 생각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는 구분이 유의미하냐 아니냐하는 문제인데요 정대표님은

유의미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구분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점인데요, 일단은 북한이 키 리졸브(훈련) 중에 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일부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데 키 리졸브 훈련 중에 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평화적 이용이 목적이니까 (훈련이) 끝나고 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더라구요. 어쨌든 향후 상황은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발사 후 상황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군사적 충돌여부는 그동안에는 북한이 선제적 도발을 할 것이라고 논의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역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사일을 쏜 후의 상황으로 가면 충돌시 그 책임론이 모호해진다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취하는 태도는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대응한다는 구도란 말이예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쨌든 이후의 한국정부나 국제사회가 추진할 방식은 유엔제재 1718호가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나아가 PSI와 MD강화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소위 PSI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에 차단(interdiction)이 시작되었을 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사일 후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PSI나 대북제재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현재 북한은 10.4선언 전의 북한이 제기해왔던 3~4개의 문제를 최대한 쟁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NLL문제, 두 번째는 군사훈련 문제, 세 번째는 정전협정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논의 계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북미간에 협상국면이 조성된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2012년을 목표로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고리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자 변수에서 보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어렵지만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라크 문제나 아프간 문제나 등등을 본다면 협상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문제(정전문제, NLL문제, 군사훈련문제)들이 토론 의제들로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느냐,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장환: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박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국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면, 일단 몇 가지에 있어서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입장에서 급속한 북미관계의 개선은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아시다시피 93,94년 위기 때에 양자 간의 대결을 중심으로 풀어내던 것들을 중국이 전략대화로 전환시키면서 6자회담이라는 틀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계획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거죠. 다시 말

쫓드리면, 대국굴기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최초의 사건이 6자회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관련 위기를 중국이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급속한 해결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까 정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6자회담 초기와 같이 강하게 북한을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해결을 다시금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요소 제거의 과정에 반드시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다. 북한에 강도 높은 개입이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제스처, 억제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새로운 지도체제(5년 뒤 그 다음 지도체제가 형성되고 있는)를 갖추는 시기인데, 북중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원조를 약속했다고 북한관료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전까지 북미관계가 나빠지면 북중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북중관계가 나빠지면, 북미관계는 좋아지는 언밸런스한 규칙성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중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이 위성을 쏘고, 내지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 중국으로서 딱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남한 내지는 미국이, 특히 남한이 PSI나 MD에 들어가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중국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입장정리(판단)가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통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남한을 견제하겠지만, 달리 말해서 중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대립하면서 북한을 억제한다고 남한이 중국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낀다거나 중국의 성의를 알고 중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안도 현안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시간되시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성: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을 예측한 하반기부터 혹은 오바마 당선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 협상전략이 작동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끌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북한의 전략이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 자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여놓은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8년 상황과 비슷하게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북한이 협상을 좀 더 주도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협상의 국면, 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협상 법칙의 재구성이 만약 현재 이

루어지고 있다면(오바마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역 차원으로까지 올려놓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획득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98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런데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과연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협상의 국면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선된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동북아 정치질서 구축에 대해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잘 모르겠네요. 앞에서 ‘북한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과연 북한이 군사적 충돌의 암시와 위성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철: 아까 제 얘기에서 좀 빠진 건데요, 저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전혀 획득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은 neglect (무시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이게 오바마 행정부로 왔다고 해서 부시 정부의 전략의 방침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100일 말씀도 하셨고,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정책 완결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환상 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국의 공화당이나 국방부 라인 쪽에서는 이미 그런 (무시정책의) 연속선에서의 대북정책을 굳혀 놓은 것이 아니냐, 다만 부시 행정부 때가 Hawkish하게 했다면 지금은 benign하게 하는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MB정부가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하는 측면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의 신아시아구상과 결합시켜 보면 MB 정부는 명백하게 남방정책, 해양정책, 그리고 해양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중시의 하위파트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말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MB정부와 미국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는 먼저 합의된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국무부 라인에서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국무부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 자기들,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을 북한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북한의 국내정치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무시(neglect)전략의 반작용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시전략을 사용하니까 북한이 오히려 협상을 유도 하기위해 그러한 벼랑끝 외교를 하는 것인데, 그게 마치 국내정치 때문에 북한이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논쟁의 구도라고 판단하고요. 그 점에서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게 미국의 무시전략이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한 공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면에 깔린 북한의 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전체제의 전환문제, 2012년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핵문제와 동시에 협상한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부시 때는 선 핵문제와 후 정전체제문제로 단계를 뒀다면, 지금은 병행으로 분명하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지금의 상황에 복합적으로 잠재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식: 오바마행정부에 북한에 대하여 무시의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순위는 아프간이다, 2순위는 이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바마의 대외 정책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상호연관성’입니다. 힐러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세계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슈간, 국가 간, 지역 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북핵문제나 북한문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꼭 몇위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오바마행정부가 다섯 개의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주로 담당하는 중동 특사, 이란에 집중하는 중동특사, 북한, 기후변화 이렇게 다섯 개의 특별대사를 임명을 해서 다섯 개 이슈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은 오바마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면,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오바마의 대외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NPT체제 재건입니다. 내년 5월 달 회의가 일 년여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최소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지 않으면 NPT를 재건하는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주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행정부는 강대국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NATO와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 할 것이냐,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북한문제는 중국 및 러시아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문제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진전이 있지 않으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등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제 개인적으로는 오바마행정부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클린턴 때 나타났던 어중간한 무시, 선의의 무시, 부시 때 나타났던 악의적 무시를 딛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바마 정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검토의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3,4월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바마 입장에서는 1차적인 고비를 넘기고 북한과의 직접적이고 과감한 외교를 통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면 아까 이정철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전협정의 문제라든지 군사훈련의 문제라든지, 이런 군사문제까지 포함한 통 큰 협상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정 반대로 계속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 다든지, 한국이나 일본이 뒤로 따지를 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오바마는 마음이 있어도 정책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인공위성 문제 관련해서 저는 북한이 왜 쏘려고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인공위성을 갖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너무 복잡하게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공위성 발사는 2012년체제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김일성의 유훈도 있고, 6자회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를 2012년 체제, 강성대국의 상징으로 삼기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계가 틀어져버리고 6자회담이 잘 안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차원이고 인공위성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인공위성을 갖겠다라는 해석의 타당성을 갖는다면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갖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이고, 이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북미간의 접촉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든 미국이 2000년 미사일 협상 때처럼 인공위성 대리발사 해주는 문제가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면은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이 유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지요.

이정철: 정 대표님 말씀에 아까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중시하고 NPT체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오히려 과도한 행동을 했을 때 오바마로 하여금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정 대표님 말씀대로 인공위성을 갖고 싶어서 쏘았다면, 그 때도 오바마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유효하냐는 말이죠.

정욱식: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위성을 쏘다고 해서 PSI나 MD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냉각기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본과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는 이걸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평가를 하겠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제재를 가한다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렇게 논의하다가 대충 의장성명을 내고, 위반 규정하고 추가적인 발사를 경고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PSI나 MD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발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겠지만, 정치적인 발언과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PSI 참여국들이 동해나 서해에 함정을 갖다놓고 봉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말대말의 공방전에서 제가보기에는 4월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란도 2월 초에 쏘고, 얼마 전에 핵무기 한 두 개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IAEA의 결과도 나오고, 오바마에 대한 비난에 강도도 이란이 높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계속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거든요. 급하다는 겁니다.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초기 세팅에 실패할 경우에는 4년 내내 헝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세팅을 제대로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바마행정부 입장에서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제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철: 그럼 일단 북한이 ‘인공위성’ 을 쏘다면, 그것이 오바마의 대북협상 의지에는 영향을 안출것이다라는 얘기죠?

정욱식: 계속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군사적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정철: 오히려 미국입장에서는 남북군사적 충돌이 더 작은 문제 아닌가요?

정옥식: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서 인명살상이 발생했을 경우엔, 그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국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거죠. 아무리 오바마라고 하더라도 상호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거죠. 그런데 인공위성 문제는 다른거죠. 그것은 말대말의 전쟁을 벌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수습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으로 간다면, NLL 등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정철: 그 시간지체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서보혁: 제가 최근에 정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카터정부부터 지난 부시정부까지 북미관계, 미국 행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봤는데, 냉전시대 탈냉전시대를 막론하고 북한이 먼저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인지 민주당이던지간에, 결국 북한이 약소국으로서의 강대국에 대한 합리적인 자기방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은 뭐냐? 제가 봤을 때 좀 절제된, 자기가 상황을 통제해 나가면서 일종의 위기외교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가 토론을 잠깐 했지만, 타겟이 어디냐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크고 일차적인 것은 결국 미국과 오바마행정부 임기 내에 큰 틀로 상황을 바꾸자는 한반도 평화라든지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대미외교협상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바마행정부의 적어도 외교라인은 클린턴 정부의 업그레йд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Engagement policy(관여,개입정책)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재판, 업그레й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정치외교적 성향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쪽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행정부 1기 초반에 좀 시끄러웠지만은 관계가 좋아지고, 2기 때가 되면 상당히 격상된 관계가 유지해 나가고 지금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라든지 그리고 NPT체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확산 관리 등 사상 유례없는 미중 협조관계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때 표명했던 핵문제라든지 동북아전략, 대북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얼마 전에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절차라든지 말들을 종합해서 추측해보면 단계적 접근, 또는 조심스럽게, 일대일로 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포괄적인 deal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게 예측하면서 그 구조 속에서 보다 상황을 주도하려고 혹은 협상시 의제선점을 위해 위기외교를 벌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것을 예상하면서 북한은 그 국면을 주도하는 절제된, 자기 통제 가능한 방식에서 위기외교를 하고 있어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제가 볼 때는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서 북한이 내릴 것 같다.

그게 미국이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시점(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93-94년 북핵위기사 미국이 전쟁을 안 하는 이상은 어차피 협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지만은 협상국면

으로 가고, 북미 양자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한국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 국내외 여러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별로 좋은 다자회담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장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는 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위기를 풀고자 짜여진 6자회담의 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유용하다고 바라 볼 것인가, 아닌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회담의 관성으로 인해서 차라리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온전히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오바마행정부는(지금 대북정책이 결정이 안되었지만) 풀면 좋겠다. 핵문제 뿐만 아니라 정전체제까지 포함해서 해서 풀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NPT체제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급속하게 (추진 해)을 수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한국이 반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할 동인이 있느냐? 미국이, 전 아직 한-미-일 세 나라의 이익 정합(결부)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답판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관계에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은 각자 국내의 이익집단 내지는 정치세력에 의해서도 정책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보혁: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보자면, 그 것은 양자적 다자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SCE 틀 속에서 동서독이라든지, 서독이 프랑스나 소련이나 동구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 한 경험이 있는데요. 6자회담에 보면 5가지 실무그룹 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관계 정상화도 실무그룹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2.13 합의에 보면 이 다섯 개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한 합의사항은 6자회담 전체 틀에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지금 3회 됐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가는 6개국의 기본원칙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자 회담이 북핵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가야겠다는 지향, 의지는 일단 6개국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기본원칙에 관한 초안을 이제 각국 입장에서 회람되면서 계속 조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나리오는 두 개죠. 6자 회담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면서 전체를 망라해나가는 하나의 큰 집이 되고, 그 안에서 다섯 개의 워킹그룹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고, 앞으로 소멸, 혹은 새로 만들어 질 수 있겠지만 주요 관심사, 북미관계를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양자적 다자주의 조건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6자회담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당장은 북핵문제, 한반도 비핵화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나가면서 북미관계라든지, 북일관계의 양자적인 관계는 거기서 발전해서 따로 독립해서 북미, 북일관계는 결국 양자회담 구도로 독립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일 얘기하셨는데, 이건 약간 우려스럽지만은, 알다시피 미국이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해 안보전략을 추구해나가면서 동맹 파트너십으로서 일본과 한국에 취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인이지만 아주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 이렇게 (함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중국 위협론과 관련된 중국 공세가 아니라, 적어도 비정치군사적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아태지역 전체의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과의 군사동맹관계가 한반도에 묶여지지 않고, 아태지역 전반에 있어서 주한미군이나 필요하면 한국군까지도 유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노무현 정부 때 결정 난 일이고요. 지금 한국이 사실상 그것을 반대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지나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이 지역 전체에서 갖고 있는 거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틀 속에서 한국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그 것에 대해 반발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바이패싱(bypassing)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국이 그렇지 않고 일단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만 유지되면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한국의 포지션이나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제동을 걸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성: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비슷한 생각, 동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북미관계를 계속 적대적 관계로 가져간다는지, 혹은 북미긴장을 한다는지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정전체제를 해소해서 평화체제로 가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핵포기, 완전한 핵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북한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공위성조차도 북한의 2012년 국가위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 정책수단이나 상황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반도 정세에서 항상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인데, 부시 행정부와 달리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그랬듯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미일관계와 미중관계에 있어, 미국은 일본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중국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으로 미중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 전반에 대한 전략대화도 미중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동북아질서나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 전략적 영향력이 부시 행정부 때나 클린턴 행정부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고, 또한 한반도 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더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는 대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불확실한 것은 우선 북한의 의도나 지향점은 알겠는데, 북한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의 의도·목표와 수단 사이에 정합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특히 군사적 충돌

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한국 정부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또는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약간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바마 정부는 과연 북한과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수단과 시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와 직접 관계도 있으면서 전략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들을 풀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장환: 다른 분들 생각정리하실 시간동안 제가 미중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미중간의 협조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걸 뭐 이익균형자론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나면, 클린턴 시기에 미중관계의 협력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좀 수세적인 의미에서 협조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지금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중국 상황을 보았을 때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선택에 의한 협조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고 상상 이상으로 세계경제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당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 묻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한 그런 시각에서 (미중협조관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금융위기의 진전정도(회복정도)에 따라서 미중관계는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철: 제가 보기엔 미중관계는 다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견해인 것 같아요.

정옥식: 미중관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정도의 핵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경제의 위기하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만문제도 안 들어가 있고, 인권문제, 민주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중요시 했던 것들이 빠져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의제가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금 둘 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보호주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의회에서 ‘철강제품은 미국 것을 사라’.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런 점이 미국이 대외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내치의 문제, 내부적인 경제상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해 줄 입장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조금 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미국은 좀 더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중국이 미국 채권 구매하는 것을 일시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또 미국경제 휘청거릴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음모론이 나올 것 있고요. 이런 잠복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WMD 관련해서도 상당히 동상이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중관계가 그렇게 순탄한 국면을 가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핵심적인 문제

였던, 인권문제 대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은 확실히 좀 과거보다 낮아지겠지만,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3대 의제문제 관련해서 미중관계가 순탄한 국면을 가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성: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이익이 분리되고 충돌하는 갈등의 존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같이 협력해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쪽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복 때문에 문제가 심화되지요. 또한 이 사실을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알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한 협력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미중 지도부 사이에 완벽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북한의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철: 덧붙여 보면, 저희가 검증할 부분이 6자회담인데, 6자회담 대표가 성김이 됐단 말예요. 대북특사는 보스워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대북라인이 격하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김이 나가는 6자회담에 북한에서 사실 김계관이 이제 못나오는 거죠. 리근이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 6자회담의 급이 하나씩 낮아진 거예요 미국에서 성김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6자회담의 정무적 역할, 즉 재량권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보스워스의 위상인데요 그는 Special envoy(특사)도 아니고, special representative(특별대표)인데, 이 분은 학장을 겸직한다 말입니다. 전임도 아닌데 평소에 학장하다가 북한문제 생기면 북한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실제 북한문제를 핵심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 보스워스 대표에게 갈 건가, 아니면 계속 캠벨 차관보가 주도 할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처럼, 정말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문제 우선순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냐,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정욱식: 그 반대로 생각할 소지는 없습니까? 성김의 직함이 Special envoy이고, (작년에 진급을 시킨거죠) 6자회담 수석대표가 되서, 거기에 하나를 더 얹은 셈이죠. 그리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된 커트 캠벨은 크리스토퍼 힐이 당시 북한담당 차관보처럼 일을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미국에 다섯 명의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철: 아니죠, 중동 대표는 Special envoy이고, 미첼은 상원의원 출신이예요.

정욱식: 데니스 로스(중동특보) 같은 경우에도 직함이 특별보좌관(special advisor)입니다. 정확히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첼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중동평화협상 담당이고, 로스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담당이죠. 성김은 이미 6자회담 관련해서 Special envoy가 된거구요, 그 위에 special representative로 보스워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정철: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문제가 제일 우선순위니까 상원출신 envoy가 간 거고, 성 김은 옛날부터의 그 직위로 해서 간 거니까, 우리는 성김의 직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김을 보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급이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스워스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보스워스 대표가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과 재량을 가진 대북특사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박순성: 그런데 과거의 힐의 경우에도 보면, 처음부터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 사람의 지위와 무관하게, 과연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주느냐의 문제라고 바라본다면, 지금 보스워스에게 주어진 임무나 역할은 실제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북한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직접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김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미국이 6자회담보다 북미회담을 중시하고 집중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보혁: 힐러리 장관이 보스워스를 기자들 앞에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요, 특사고 대표고 얘기가 많은데, 성김은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고, 보스워스는 북한문제 전체를 다루는 미국 대표인 겁니다. 힐러리가 말하기를, 거기에는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체제, 미사일까지 북한문제 관련된 것은 다 다루요. 그 사람의 역할이 국무장관과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북쪽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김은 분명히 힐보다는 약하게 갔지만은, 보스워스를 엮은 것은 이 두 사람을 합쳤을 때 힐보다는 훨씬 높은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양자회담의 사전 대비, 뭐 이런 의미도 있어서 일단은 부시정부 말기에 했던, 그런 단계적인 접근보다는 아무튼 큰 틀에서 뭔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탐색하고 검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힐러리 순방과 보스워스 순방이 끝나고 그럼 제가 볼 때 큰 틀은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조율해서 할 것 같습니다.

박순성: 지금 서 박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미 국무부 내에서 큰 틀은 짜여 있고, 그 틀을 가지고 북한, 중국, 남한의 반응을 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정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순성: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지금 긴장을 강화하고 인공위성 혹은 미사일 발사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일주일 동안 북한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단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핵문제, 대북정책을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그 때는 선거유세니까, 이명박 선거 때 비핵개방3000처럼) 당선 이후에도 그 정책기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선에 경쟁했던 힐러리를 부통령이 아니고 국무장관을 주면서 외교부문의 상당한 자율, 재량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국무장관이 되면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어떤 사람이나면, 아시다시피 남편이 해운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지난 한국 순방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 비행기에 올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안부인사를 전했어요. 그것은 의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이같은 일은 보스워스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재연됐어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한다면 큰 틀에서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시정부때 북한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비해 진전된 입장 변화입니다. 상당히 타이밍이 당겨진 것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고위인사의 공식 발언을 통해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정철: 그것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대면, 첫째. 만약 힐러리 장관이 그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기 와서 세습문제 등 북한의 후계자 문제를 언급한다거나 하는 것도 의도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작년부터 핵보유인정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오바마행정부의 NPT체제 재확립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미국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견과 충돌이 있어서 정책이 확립,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보혁: 그건 어차피 정책결정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의견은 진보해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core그룹이 인물, 형식으로 장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갖고 있고, 적어도 그 사람의 engagement policy에는 자기철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정철: 그런데 힐러리 장관이 이번에 와서 하는 걸 보면, 힐러리 장관이 준비 되었다기보다는 아시아와 한국,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정욱식: 근데 핵보유 인정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바마가 취임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핵무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폭장치 안에 플루토늄을 넣고 실험하면 그게 바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핵실험과 관련해 nuclear weapon test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nuclear test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nuclear divide weapo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핵폐기에서 비핵화로 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희박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힐러리가 후계체제 문제를 언급한 것도 결국 핵심적인 얘기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권좌에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철: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이구요.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입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이미 북한에 전달되었고, 그것을 지금 일본과 중국과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보혁: 그 얘기까지는 안했고, 내 말은 그걸 최종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나가고 있다. 뭐 이런 말 이었습니다.

정욱식: 힐러리가 지금 가치를 치고 있단 말예요. 그 전에 큰 틀로 볼 때,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바이든(부통령)이 유럽하고 주로 러시아 쪽 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게이츠나 세 명의 특사들이

중동이고, 그리고 힐러리가 중국하고 아시아 쪽, 이렇게 크게 역할 분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힐러리의 아시아 순방 중 몇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계체제에 주목을 했습니다만, 가지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HEU문제와 관련해 ‘별것도 아닌 문제에 집착했다가는 정말 큰 문제를 놓칠 수 있다.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가지를 쳐버리거든요? 근데 인증청문회 할 때는 비확산문제, 우라늄농축문제 이런 것들도 강하게 다룰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막상 아시아 순방 오고, 협상에 들어가면서 협상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거죠.

이정철: 그것이 의도된 행위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힐러리 장관의 학습과정으로 보느냐 이 건 다른 문제죠. 제가 지금 문제를 던진 것은, 미국쪽에 지금 준비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북한의 행태를 어떻게 볼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접근법으로 타당한가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서보혁: 선생님 그것은 잘못된 질문방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해석해 놓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나라의, 그것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공식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었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던진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나 외교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아요.

박순성: 결국은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오바마-바이든의 플랜이 지금 현재 백악관에 어젠다로 올라가 있고, 클린턴 국무장관이 청문회와 아시아 순방 오기 전, 한국 등에서 발언한 것 등을 보았을 때, 지금 거기서 가장 유력하게 일관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할 의사만 어느 정도 진지하게 가지고 있으면 선후 관계없이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태도이지요. 이에 대한 가장 근거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오히려 김정일 체제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바뀌기 전에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이다.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그가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도와줬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갔다는 것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메시지를 던지고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미국 국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약간 기다려 줄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계속 압박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1,2월 사이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큰 흐름은 북미 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다.

이정철: 그걸 변수로 보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위자들이 선택전략을 평가할 때 문제는 접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미국이 북한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2.13 이후에 나온 메시지에서 한 발도 안 나간 것이거든요. 그럼 북한입장에서 2007년 2

월 13일 이후 나온 워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여전히 기다려라, 이렇게만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박순성: 그런데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협회에서 한 이야기를 왜 2.13합의에서 한발도 안 나갔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정철: 청문회부터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북한입장에서는 저것은 국내용이므로 의미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거죠.

서보혁: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클린턴이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게 국내정치에 영향이 과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인준을 통과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정철: 힐러리 장관이 거기서 북한문제 말을 잘못한다고 인준이 통과 안 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박순성: 인준에 즈음해서 2.13합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정철: 지금 6자회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검증문제이잖아요. 거기서 한 발도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북핵 불능화가 중단되고 있는데, 오늘인가 북한 에너지 지원 다 끝났잖아요. 에너지 지원 다 중단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재처리 관련 행동에 나선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한테 재처리하지 말고 너 그대로 있어라라고 한들 북한이 수용하겠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게 왜 너희는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보혁: 이교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논리 전개에 대해서 미세하게 파고들면서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지금 마지막 얘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 이야기는 뺏시다. 그럼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몇 차례 한 발언들 이런 것이 지금 2.13 이후에 검증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사태진전이 되지 않은 거고, 미국의 정권 교체되고 난 이후에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금 실천은 아직 안됐지요. 상당히 부시정부 말기에 그나마 나아졌던 그것보다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예요. 그게 실현이 (아직) 안 된 거죠.

이정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측면이 질적으로 다르다는거죠?

박순성: 지금 따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두 개의 해석이 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소위 협상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북한에 지금 완벽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하나 있지요. 두 번째는 미국은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고, 북한도 그 메시지를 알 것 같은데, 남북관계 때문에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식: 저는 예를 들어서 검증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목할 것은 검증문제 얘기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6자회담이 열릴 경우에 ‘검증의 정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올 법도 한데, 일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이 재개 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문제에 대한 침묵이 그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증 의정서 합의서 채택을 요구할 경우에 지난번처럼 또 깨질 것이라는 것을 지난 12월 회담의 학습효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를 해봐야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느냐?’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김정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게임의 법칙을 오바마행정부가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꾸 핵무기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군사적 억지력 포기의 문제를 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 중유 좀 떠주고, 에너지 지원 등으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 이걸 그럴 수 없는 군사문제다’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하면 북한한테만 일방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호불가침 약속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좋은 것이고, 관계정상화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북한이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이 핵 포기문제인데, 이것 관련해서 한-미-일 3국, 특히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군사적 상황 조치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정철: 그러면 정 대표님은 박선생님 분류에 따르면 2가지 중 전자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박순성: 그 부분은 <조선신보>의 논지에 따르면 군사적 억제력의 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대가는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 대표께서는 평화체제 플러스 알파를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철: 정전체제 해소할 때 군사훈련문제는 다 포괄적으로 다 논의하는 거 아닌가요?

정옥식: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거죠.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는 핵우산 철수하고, 일시통과금지, 핵무기의 재반입금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9.19공동성명에 명시하자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안 받고 계속 싸우다가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힐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이야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기본적으로 개념하고 목표사이에 상당한 차이,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협상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미 핵 실험을 한 마당에 이걸 군사vs군사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적어도 핵포기문제는 군사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미국의 군사적 양보조치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박순성: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얻은 결론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큰 흐름을 점검하고 있지만,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전달한 메시지가 북한에게 충분히 지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둘째, 미국이 대북전략을 완전히 세우지 못했으며, 또한 북한도 미국이 대북전략을 완전히 세우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 혹은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미국에게 빨리 명확한 대북정책을 결정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갖추어졌지만, 또한 이에 대해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 억제력의 포기가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요구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단순한 평화체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혹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의 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정욱식 대표, 그리고 좌담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KNSI**